

KCCI ESG NEWSLETTER

대한상의 ESG 뉴스레터



• **전문가 기고**

2026년 주목해야 할
ESG 주제와 이슈

• **ESG 주요 현안**

CBAM 확정 기간 진입과
KSSB 기후 공시 의무화 대응

• **국내외 주요 ESG 뉴스**

• **ESG 통계 지표**

ESG 금융
ESG 평가
기타 통계

2026
JAN

2026년 주목해야 할 ESG 주제와 이슈

황정환

김앤장 지속가능성공시센터 센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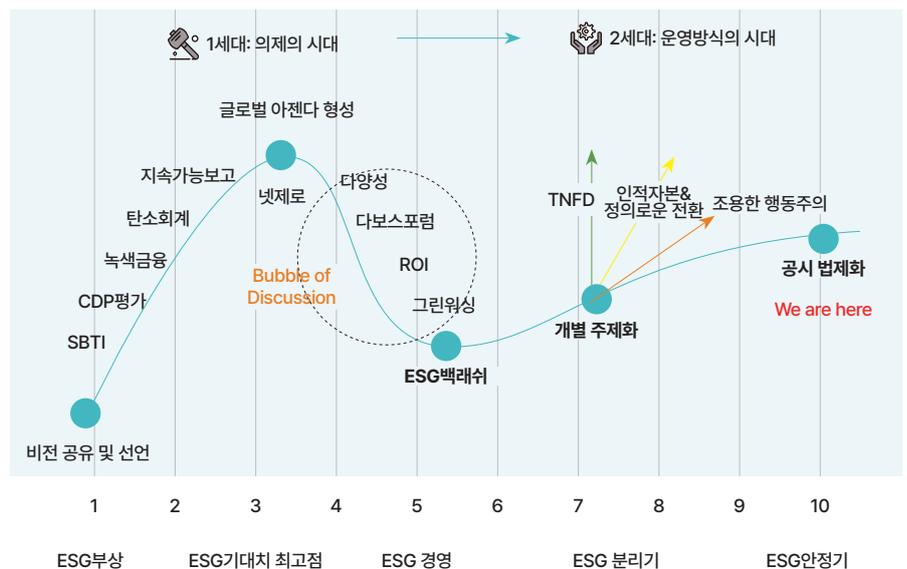
'데이터가 없으면 시장도 없다.' 2026년 병오년(丙午年)을 맞는 글로벌 ESG는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2026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를 통해 경고한 허위 정보와 사회적 분열 리스크, 그리고 CES 2026에서 목격된 '지속가능성이 기술 혁신의 표준이 된 현상'은 이제 ESG가 윤리적 규범을 넘어 정치, 규제, 기술, 자본 시장의 리스크와 기회가 실질적으로 복합적으로 나타나며 진화하고 있음을 말한다. 이는 기업은 ESG경영에 있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며 강제되고 있는가'라는 실천적 메커니즘으로 전환이 필요함을 말하며, 블룸버그나 MSCI와 같은 자본시장 투자자는 실용주의에 따라 투자가 이루어 질 것임을 의미한다. 이번 호에서는 2026년에 우리 기업들이 직면할 ESG 동향과 10대 핵심 이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ESG 트렌드의 진화:

'아젠다의 시대'에서 '작동 방식의 시대'로

ESG 1세대가 글로벌 아젠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략 로드맵을 세우며 제도화를 준비하던 시기였다면, 2세대는 ESG가 모호한 묶음에서 해체되어 시장 메커니즘을 설계·운영하는 '규칙의 시대'로의 전환을 말한다. 이 전환의 접점에서 최근 미국의 반 ESG 기류, 유럽의 규제완화 및 간소화, 기업들이 목소리를 낮추는 그린허싱 현상, 저조한 ESG투자수익률 등으로 인한 ESG회의론이 있다. 그러나 이는 ESG 후퇴라기 보다 ESG 1세대의 한계 인식과 COP31에서 강조된 '감축을 넘어선 적응과 실질적 이행'과 같이 개별 주제 중심으로 실행 가능한 실용주의적 ESG 2세대로의 필연적 과정에서 나온 마찰로 이해해야 한다.

<그림1. ESG의 변화와 2026년 10대 국내 핵심현안>



2026년 주목해야 할 ESG 주제와 이슈

2. 2026년 ESG 20대 핵심 이슈 및 실천적 대응 전략

<그림1. ESG의 변화와 2026년 10대 국내 핵심현안>



이슈1.

지속가능성 공시의 의무화와 그린워싱 등 리스크의 전면화:

전 세계 GDP의 60%를 차지하는 국가들이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표준을 도입하여 비재무 정보의 글로벌 비교 가능성이 확보되었고, 한국 역시 KSSB를 통한 공시 의무화 로드맵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는 공시가 더 이상 PR을 위한 '자율 보고'가 아니라 법적 책임을 수반하는 IR보고로 변화됨을 의미하며, 데이터 오류가 발생할 경우 징벌적 과징금이나 소송의 직접적인 대상이 될 수 있어 그린워싱 등 '공시리스크'가 기업의 가장 큰 현안으로 부상했다. 기업은 공시 준비를 재무, IR, 법무팀이 주도하는 통합 대응 체계로 재편하고 재무보고에 준하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정보의 컴플라이언스 신뢰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슈 2.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화와 스코프 3 산출 고도화:

2026년 1월 1일부터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인증서 구매가 본격화되며 탄소배출량은 단순 환경 지표가 아니라 관세 및 매출원가로 환산되는 실질적 무역 장벽이 됐다. 특히 공급망 배출량(Scope 3)은 자체 배출량보다 평균 11.4배 높지만, 가치사슬 내 낮은 추적성과 상이한 산정 방법론으로 인해 신뢰성 확보가 매우 까다로워 데이터 불확실성 자체가 수출·투자·공급망 퇴출 리스크로 직결될 수 있다. 기업은 데이터 입증 실패 시 수출 차단 또는 막대한 추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ERP와 탄소회계 시스템을 연동해 제품 단위 탄소발자국을 정밀 측정하고, Scope 3 경계 설정을 탄소세·자본비용에 영향을 주는 핵심 재무 의사결정 영역으로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또한 K-ETS 4차 계획기간과 연계해 탄소 비용을 매출원가에 반영하고, 감축 기술 투자 효과를 재무적으로 모델링하는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

2026년 주목해야 할 ESG 주제와 이슈

이슈 3.

공급망 실사 지침(CSDDD)과 가치사슬 책임의 실전화:

옵니버스법안이 확정되고 유럽 공급망 실사 지침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되었다. 이는 인권과 환경 관리는 기업 내부를 넘어 해외 사업장 및 협력사를 포함한 가치사슬 전체의 책임으로 확장되었으며, 특정 규모 이상의 실사가 불가능한 협력사는 공급망에서 즉각 퇴출될 수도 있는 실전 단계에 진입했다. 특히 2·3차 협력사에서 아동 노동이나 환경 파괴 리스크가 식별될 경우 원청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5%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가치사슬 전반의 투명성 확보는 생존의 문제다. 기업은 단순 설문 조사를 넘어 디지털 추적성 시스템을 도입하여 하위 협력사의 실시간 데이터를 확보하고, 고위험 협력사에 대해서는 개선 요구를 명문화하며 기술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공급망 안정성을 구축해야 한다.

이슈 4.

AI 가속화와 '에너지 패러독스'의 기술 거버넌스:

인공지능은 공급망과 탄소 데이터를 관리하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그 자체가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여 기업의 넷제로 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에너지 패러독스'를 초래한다. CES 2026에서 확인된 AI의 전방위적 확산은 에너지 확보를 기업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기술-거버넌스 리스크로 격상시켰다. AI 기술 도입이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이어지는 모순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환경 성과 등급 하락은 물론 투자 자금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 실무진은 저전력 AI 모델 도입과 재생에너지 기반 데이터센터 운영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이사회 수준에서 공급자 측면의 기술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전력 수급 전략과 기후 목표 간의 정합성을 분기별로 점검해야 한다.

이슈 5.

국가적 에너지 고속도로와 전력 조달의 비즈니스 경쟁력:

RE100 달성 요구와 AI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생산지와 수요지를 잇는 지능형 전력망(HVDC) 확충이 한국 기업의 생존 현안이 되었으며, 이는 캠페인을 넘어 전력 조달의 안정성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제조업의 근본적인 원가 관리 과제다. 안정적인 무탄소 전력을 적기에 확보하지 못하는 기업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될 위험이 크며 이는 곧 매출 하락으로 직결된다. 이를 위해 무탄소 에너지(CFE) 조달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정부의 에너지 고속도로 인프라 전략에 맞춘 중장기 수급 로드맵을 수립하며, 에너지 효율 개선 투자 전담 조직을 가동하여 전력비 상승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통제가 필요하다.

2026년 주목해야 할 ESG 주제와 이슈

이슈 6.

재무적 실용주의의 귀환과 '알파(Alpha) ESG' 성과 증명:

투자자들은 이제 모호한 ESG 라벨보다 수익률과 리스크 저감의 실체가 있는 '돈이 되는 ESG' 데이터에만 반응하며, 실제로 안전 지표가 우수한 기업(연 +3.5%)이나 탄소 성과가 우수한 기업(연 +12%)이 초과 수익(Alpha)을 달성한다는 실증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다. ESG 활동의 투자 대비 수익률(ROI)을 증빙하지 못하는 기업은 자본 시장에서 저평가받으며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ESG 활동의 재무적 기여도를 숫자로 환산하는 평가 체계를 도입하고, 탄소 감축 성과를 관세 및 에너지 비용 절감액으로 변환하여 투자자들에게 경영 실용성을 정량적으로 입증하는 데이터 보고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이슈 7.

TNFD 자연 자본의 재무화와 순환경제의 새로운 수익모델:

지구온난화 1.5도 달성이 사실상 어려워지며 기후 완화보다 자연 복원력·적응이 부상했고, TNFD 표준화로 수자원·생물다양성 리스크가 자산 가치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자리 잡았다. 물 스트레스 지역 용수 부족이나 원자재 산지 생태계 파괴는 발생 시 자산 가치 20% 이상 훼손이 가능한 치명적 리스크이다. 기업은 수자원 의존도·오염 데이터를 정량화하고 자산 단위 기후 적응 전략을 수립하며, 자연 리스크를 보험가액 재산정과 연계해 재무 손실 방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순환경제 전환은 원자재 비용 절감과 리세일 등 신규 수익원 창출 기회이며, 관련 규제는 원료 공급망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자원 효율성을 경쟁력으로 만든다. 기업은 에코디자인·재생원료 확대·회수/재자원화 체계를 구축해 원자재 안정성과 추가 수익을 동시에 확보하는 비즈니스 모델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이슈 8.

정의로운 전환(공정전환)과 '책임 있는 AI':

윤리 거버넌스 기술 전환과 AI 도입 과정에서의 고용 불안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새로운 사회 영역의 과제이며, COP31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진 '정의로운 전환'은 노동자의 직무 재교육 성과를 기업 신뢰도의 핵심 지표로 만들었다. 특히 AI 시스템의 편향성 배제와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는 사용자 및 노동자 측면에서의 '책임 있는 AI' 핵심 과제다. 기업은 인적 자본의 가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AI 도입 로드맵과 연계된 인력 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성과를 KPI화해야 하며, 사회적 불평등(TISFD) 공시 표준에 맞춰 AI 기술의 윤리적 사용 거버넌스를 정립하여 데이터 중심의 인적 자본 경영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2026년 주목해야 할 ESG 주제와 이슈

이슈 9.

산업안전 규제와 거버넌스 리스크관리:

한국정부가 강조하는 산업안전, 중대재해는 사회영역의 핵심주제로 부각하고 있다. 중대재해 발생 시 부과되는 과징금과 영업 정지 조치는 안전 경영을 기업의 생존권과 직결시키는 강력 규제로 실전화되었으며, 이는 단순 평판 이슈가 아니라 경영권 보호와 영업 지속권의 핵심 요소다. 사고는 이제 경영진의 형사 책임과 영업 활동 중단이라는 최악의 리스크를 의미하며, 금융권 역시 이를 자본 조달의 핵심 변수로 반영하기 시작했다. 최근 상법 개정으로 인한 주주총실의무 강화는 거버넌스의 리스크관리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사후 대응 위주의 관성에서 벗어나 정기적 인권영향평가, '스마트 안전 시스템'을 현장에 도입하여 위험을 실시간 감지하고, 안전 성과 지표를 경영진 보상 체계에 엄격히 연동하여 현장 단위까지 관리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슈 10.

전환금융의 주류화와 저탄소 생존 로드맵:

2026년 금융 시장의 화두는 무조건적인 투자 배제가 아닌 고탄소 산업의 저탄소 연착륙을 돕는 '전환금융'의 확산이며, 철강이나 화학 등 탄소 집약 산업은 실질적 탈탄소 현금흐름을 입증해야만 저리 자본 조달이 가능하다. 막연한 탄소 중립 선언만으로는 자금을 유치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공정 전환 자본적 지출과 에너지 포트폴리오 변경 계획이 수반되어야 한다. 실무진은 하이브리드 PPA와 에너지 저장장치(ESS)를 결합한 구체적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탈탄소 로드맵을 재무적 언어로 기술하며 전환금융 전용 펀드나 정책 금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금 조달 구조를 최적화해야 한다.

3. 맺음말

2026년은 ESG 담론이 시장 메커니즘과 제도로 안착하여 작동하는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SG가 조용해졌으니 끝났다"는 판단은 기업에 가장 치명적인 위험이 된다. 지금은 수면 아래에서 모래알 같은 실력 격차가 바닷돌처럼 쌓이는 시기이며, 데이터를 증명하지 못하는 기업은 통관·거래·금융조달·계약 유지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2026년이 우리 기업들에 새로운 경쟁 우위를 선점하는 대도약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2026년 주목해야 할 ESG 주제와 이슈

현안	주요 내용	핵심 이슈	기업 대응 방안
1. 공시 의무화	ISSB 표준 도입(GDP 60% 국가) 및 KSSB 로드맵 구체화.	'자율 보고'에서 법적 책임 수반 'IR 보고'로 전환. 그린와싱 시 징벌적 과징금 발생.	재무·IR·법무 통합 대응 체계 구축 및 재무보고 수준의 내부통제 시스템 확보.
2. CBAM & Scope 3	EU CBAM 본격화 및 Scope 3 배출량이 자체 배출량의 \$11.4\$배 수준임.	탄소 배출량이 매출원가(COGS) 및 관세로 환산되는 실질적 무역 장벽화.	ERP-탄소회계 시스템 연동, 제품 단위 탄소발자국 측정 및 재무적 모델링.
3. 공급망 실사 (CSDDD)	옴니버스법 확정으로 가치사슬 전체에 대한 인권·환경 관리 책임 확장.	실사불가능한 협력사는 공급망 퇴출. 위반 시 매출액 최대 5% 과징금 리스크.	디지털 추적성 시스템 도입, 고위험 협력사 대상 기술 지원 및 교육 강화.
4. AI 에너지 패러독스	AI 확산으로 인한 전력 소비 급증이 넷제로 목표를 저해함 (CES 2026 확인).	AI 도입이 탄소 배출 증가로 이어지는 모순(에너지 패러독스) 발생.	저전력 AI 모델 도입, 재생에너지 기반 데이터센터 및 기술 거버넌스 구축.
5. 에너지 고속도로	재생에너지 수요 대응을 위한 지능형 전력망(HVDC) 확충이 생존 현안임.	무탄소 전력 확보 실패시 글로벌 공급망 배제 및 매출 직격탄.	CFE 조달 포트폴리오 다변화 및 에너지 효율 개선 전담 조직 가동.
6. 알파(Alpha) ESG	안전(연 3.5%), 탄소(연 +12%) 성과 우수 기업의 초과 수익 실증 데이터 축적.	ESG 활동의 ROI(투자 대비 수익률) 증빙 실패 시 자금 조달 비용 상승.	ESG 활동을 재무적 수치(관세·원가 절감액등)로 환산하여 정량적 입증.
7. TNFD & 순환경제	지구온난화 1.5도 달성 난항으로 자연 복원력 및 적응 이슈 급부상.	수자원·생태계 리스크 발생 시 자산 가치 20% 이상 훼손 (Tail Risk).	에코디자인 도입, 재생 원료 비중 확대 및 자연 리스크의 보험 가액 반영.
8. 정의로운 전환	AI 도입 과정의 고용 불안과 기술 윤리가 COP31 주요 의제로 채택됨.	인적 자본 가치 훼손 및 AI 시스템의 편향성·불투명성 리스크.	인력 전환 계획 KPI화 및 TISFD(사회적 불평등) 표준 기반 윤리 거버넌스 정립.
9. 산업안전 & 거버넌스	중대재해 처벌 강화 및 상법 개정으로 주주 충실의무/거버넌스 리스크 관리 강조.	사고는 경영진의 형사 책임과 영업 활동 중단을 의미하는 최악의 리스크.	스마트 안전 시스템 도입 및 안전 성과 지표를 경영진 보상 체계와 엄격 연동.
10. 전환금융	고탄소 산업의 저탄소 연착륙을 돕는 '전환금융'이 금융 시장의 주류로 안착.	막연한 선언 대신 구체적 CAPEX(시설투자) 계획 없이는 자금 유치 불가.	하이브리드 PPA·ESS 결합 투자 계획 수립 및 전환금융 전용 펀드 적극 활용.

CBAM 확정 기간 진입과 KSSB 기후 공시 의무화 대응



국내 모 컨설팅기업이 18개 산업군 38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내 기업들이 2026 ESG경영의 핵심과제로 “기후공시 의무화 대응”을 꼽았다고 한다. KSSB(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기후공시 의무화를 두고 하는 말이다

또한 CBAM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특정 산업과 수출 구조에 직접적인 비용 압박을 가하는 제도다. EU 이사회가 2025년 5월 27일 CBAM 개정안을 최종 승인함으로써 입법 절차가 완료되어 2026년 본격 시행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완화된 최종승인 내용이지만 잘 준비해야만 한다. 최종 승인된 확정기간 첫해인 2026년도에 EU에 철강과 알루미늄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1년뒤인 2027년 2월 1일부터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기존 보고서 제출 일정도 매년 5월 30일에서 매년 9월 30일 까지로 조정되었다. 대상 기업도 연간 누적 중량 50톤 이상의 기업으로 확정되었다. 즉 연간누적 중량 50톤 이하의 기업들은 CBAM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년부터는 현지 수입업자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에 비용 부담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자체적인 탄소 배출량 산정 역량이 부족하고, 검증 비용 부담까지 더해질 경우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해당 의무 기간에 진입함으로써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산업군은 철강과 알루미늄 관련 분야이다. 정확한 탄소배출량 산정방법 이해와 공급망 내에서의 산정절차 등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금년 들어 기업이 제도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설명회와 교육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산발적으로 진행돼 온 탄소배출량 산정 교육을 체계화하고,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수출 비중이 높은 철강·알루미늄 업종을 중심으로 실무 중심 교육을 강화한다.

2026년은 데이터 기반의 기후공시, 특히 IFRS S2가 요구하는 기후공시는 훨씬 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이는 단순한 규제 대응이 아니라, 기업이 기후변화를 재무적으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공식적으로 설명하라는 요구이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KSSB가 발표한 IFRS S2가 요구하는 공시 수준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본시장의 표준 언어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미 글로벌 투자자들은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시 태스크포스(TCFD) 권고안을 넘어, IFRS 재단이 제시하는 통합적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2026년은 그 요구가 제도적으로 구체화되는 원년이 될 전망이다.

기후공시가 환경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 이유

그동안 많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SR보고서)에서 기후변화는 비교적 익숙한 주제였다. 탄소중립 선언, 감축 목표, 재생에너지 전환 계획, 친환경 투자 로드맵 등은 이미 수년 전부터 반복적으로 등장해 왔다. 일부 선도 기업의 경우 Scope 3 배출량 관리나 공급망 탄소 관리까지 포함하며 공시 수준을 높여왔다.

그러나 IFRS S2가 등장하면서, 같은 이야기도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과거의 기후공시가 주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What)와 얼마나 줄였는가(How much)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그것이 재무에 무엇을 의미하는가(What does it mean financially)로 질문의 방향이 전환되고 있다.

CBAM 확정 기간 진입과 KSSB 기후 공시 의무화 대응



IFRS S2의 출발점은 분명하다. 기후변화는 기업의 재무성과와 재무상태, 그리고 미래 현금 흐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그 영향이 있다면, 기업은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어떻게 경영에 반영하고 있는가?

실제로 유럽의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과 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ESRS)은 이미 이중 중요성(double materiality) 개념을 통해 재무적 영향과 환경·사회적 영향을 동시에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IFRS S2는 이 중 재무적 중요성에 더욱 집중한다는 점에서, 투자자 관점의 공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

IFRS S2의 4대 필라, 그러나 핵심은 재무영향

IFRS S2는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와 목표라는 네 가지 필라(pillar)를 기본 구조로 삼고 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미 많은 기업이 TCFD 권고안을 따라 사용하고 있는 익숙한 틀이다. 문제는 깊이와 구체성의 수준이다.

예를 들어 전략 항목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거나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30% 감축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IFRS S2의 요구를 충족하기 어렵다. IFRS S2는 그 전략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재무적 함의를 가지는지 설명할 것을 요구한다:

- 향후 매출 구조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예: 저탄소 제품 비중 확대에 따른 매출 포트폴리오 변화)
- 원가와 자본적 지출(CAPEX)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예: 탄소 비용 증가, 설비 전환 투자)
- 기존 자산의 가치평가나 회수 가능성에 어떤 함의를 갖는지
(예: 화석연료 의존 자산의 손상 위험)
- 자금조달 비용이나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예: 녹색금융 접근성, ESG 채권 발행 조건)

또한 위험관리 필라에서는 기후 리스크가 기업의 전사적 리스크 관리 체계(ERM)에 어떻게 통합되어 있는지, 물리적 리스크와 전환 리스크를 어떻게 구분하여 평가하는지, 단기·중기·장기 시계에서 어떤 우선순위로 관리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지표와 목표 필라는 단순히 Scope 1, 2, 3 배출량을 보고하는 것을 넘어, 기후 관련 기회와 리스크가 재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할 수 있는 지표들을 포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저탄소 제품 매출 비중, 탄소집약도(원단위), 기후 관련 CAPEX 비율, 탄소가격 시나리오별 EBITDA 민감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CBAM 확정 기간 진입과 KSSB 기후 공시 의무화 대응



재무영향 데이터 평가 및 보고를 위한 5단계 과정이 있다.

<재무영향 평가 및 보고 5단계>

1. 리스크 및 기회 범위 설정

TCFD 범주 전반에 걸쳐 잠재적으로 중요한 기후 리스크와 기회를 식별하고 이를 중대성 원칙에 따라 우선 순위화 한다.

2. 영향 및 계산 경로 개발

선정된 리스크 및 기회에 대한 영향 경로 및 계산 경로를 수립한다.

3. 관련 시나리오 및 공급망 데이터 수집

리스크 및 기회의 재무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기후 시나리오와 시간 범위를 결정한다. 외부 시나리오 데이터, 공급망 가치사슬 데이터 및 재무정보를 수집한다. 평가된 영향에 필요한 기후변화 데이터 유형을 고려한다.

4. 재무영향 계산

선택한 시나리오와 시간 범위 하에서 중요한 리스크 및 기회의 재무영향을 계산한다.

5. 재무제표 가정 및 회계기준 연계성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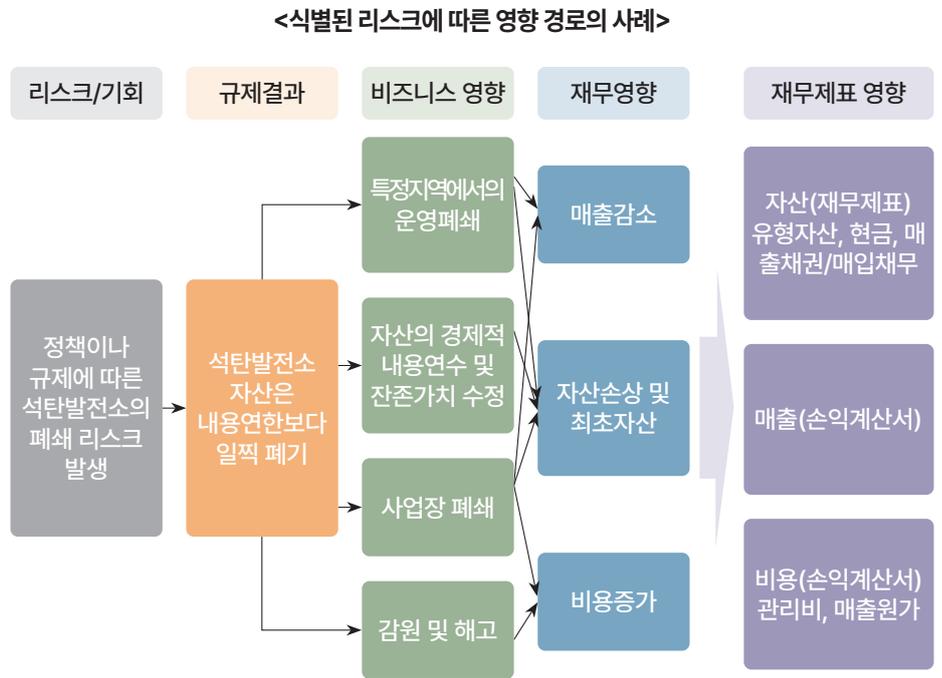
기후 고려사항을 재무 모델링 및 재무제표에 통합한다.

특히 제2단계에서의 영향경로 개발은 리스크 또는 기회가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식별된 리스크와 기회의 재무영향을 논리적으로 도출하는 방법이다. 여기에는 기후변화, 입법 결과 또는 과세와 같은 사회경제적 또는 물리적 영향, 그리고 시장 변화, 새로운 요구사항 또는 가격 변화와 같이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과적 성과에 대한 고려가 포함된다. 이러한 성과는 새로운 요구사항, 비즈니스 중단, 새로운 시장과 같은 비즈니스 영향을, 그리고 궁극적으로 재무영향을 초래한다.

기업은 영향 경로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리스크와 기회가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평가하고 재무적 영향이 무엇이며 어떤 것이 중요할 수 있는지 이해하는 프로세스를 파악해야 한다. 매출과 지출, 자산과 부채, 자본과 금융 측면에서 재무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CBAM 확정 기간 진입과 KSSB 기후 공시 의무화 대응

아래 그림은 이 과정을 잘 보여준다. IFRS S2는 하나의 중심 질문으로 수렴된다. 기후변화가 우리 기업의 재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SR보고서 공시 문장, 활동의 나열에서 재무영향의 분석으로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으로 내려가 보자. 그래서 SR보고서 문장을 실제로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IFRS S2가 요구하는 변화는 형식이나 분량의 확대보다 서술의 관점과 논리 구조에 있다. 이는 단순히 표현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기업이 기후변화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의 전환을 의미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기업의 리스크와 기회를 어떻게 공시하여야 하는지 사례를 보자.

기존 SR보고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장을 하나 떠올려 보자.

“당사는 기후변화 대응을 주요 ESG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틀리지 않다. 그러나 IFRS S2 관점에서는 정보가 부족하다. 투자자는 이 문장을 읽고 다음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노력이 회사의 재무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는가, 아니면 추가 투자가 필요한가? 새로운 수익 기회를 창출하는가?

같은 내용을 IFRS S2의 관점으로 옮기면, 문장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뀐다:

“당사는 기후변화로 인한 전환 리스크가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비용과 설비 투자 규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탄소가격 상승과 재생에너지 전환 규제 강화는 주요 생산시설의 운영비용을 2030년까지 약 15~20%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당사



CBAM 확정 기간 진입과 KSSB 기후 공시 의무화 대응

는 주요 사업장의 공정 효율 개선과 에너지 구조 전환을 중기 투자계획에 반영하였으며, 향후 3년간 약 500억 원 규모의 관련 CAPEX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는 “무엇을 하고 있다”에서 그 결과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로, 활동의 나열에서 영향의 분석으로 시선이 옮겨갔다. 단기, 중기, 장기적 관점에서 운영비용과 자본적 지출 추산과 계획이 표현된다.

또 다른 예시를 살펴보자. 많은 SR보고서에서 이렇게 표현되던 내용이 있다:

“당사는 친환경 제품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를 IFRS S2 관점으로 전환하면:

“당사는 저탄소 제품에 대한 시장 수요 증가를 주요 기회 요인으로 식별하였습니다. 2026년 출시 예정인 신제품 라인업은 기존 대비 탄소배출량을 40% 감축한 모델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향후 5년간 전체 매출의 2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당 제품군의 영업이익률은 기존 제품 대비 약 3%p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연간 약 200억 원의 추가 영업이익 창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술 방식의 전환은 단순히 보고서를 더 정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는 기업이 기후변화를 진정으로 경영 의사결정에 통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재무영향 평가를 정량화된 숫자로만 써야 할까

많은 기업이 IFRS S2를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바로 정량화다. 재무영향을 숫자로 계산하라고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 불확실성이 큰 기후 리스크를 어떻게 정확한 금액으로 표현할 수 있나?

그러나 IFRS S2는 모든 것을 즉시 정밀한 숫자로 제시하라고 요구하지는 않는다. 중요한 것은 재무적 연결성(financial connectivity)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다. 즉, 얼마나를 모르더라도 어떻게, 어떤 경로로 재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이 출발점이 된다.

실제로 IFRS S2는 재무영향을 평가할 때 정성적 설명과 정량적 지표를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특히 장기적이고 불확실성이 높은 리스크의 경우, 시나리오별 범위(range)를 제시하거나,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을 통해 영향의 방향과 크기를 상대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유효하다.

예를 들어, 기존 SR보고서에서는 이렇게 쓰였던 문장이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리스크를 식별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IFRS S2 관점으로 바꾸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규제 강화와 탄소 비용 증가는 일부 사업부의 원가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철강 원재료를 주로 사용하는 B사업부의 경우, CBAM 적용으로 인해 원재료 조달 비용이 연간 50~80억 원 상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사는 이러한 영향을 반영하여 원가 관리 전략과 제품 포트폴리오 조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대체 공급선 확보 및 저탄소 원재료 전환을 통해 비용 증가분의 약 40%를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CBAM 확정 기간 진입과 KSSB 기후 공시 의무화 대응



여기에는 정확한 금액이 아닌 추정 범위가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어떤 경로로, 어느 사업부에, 어떤 규모로 재무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분명해진다. 이것이 IFRS S2가 말하는 재무영향 공시의 실질적 출발점이다.

더 나아가, 재무영향을 평가할 때는 리스크뿐만 아니라 기회(opportunity)도 함께 다루어야 한다. 기후변화는 비용 증가와 규제 부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저탄소 기술 수요 확대, 녹색금융 접근성 개선, 브랜드 가치 상승 등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도 동시에 창출한다. 균형 잡힌 공시는 리스크와 기회를 함께 다룰 때 비로소 완성된다.

시나리오 분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기후 시나리오 분석(climate scenario analysis) 역시 마찬가지다. 기존에는 1.5°C 시나리오와 2°C 시나리오를 검토했다거나 IEA의 Net Zero Scenario를 참고했다는 문장이면 충분했던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IFRS S2에서는 그 시나리오가 경영 판단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분석 결과가 전략이나 투자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핵심이다.

즉, 시나리오 분석은 더 이상 했다/안 했다는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전략적 의사결정의 도구로 기능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렇게 바뀔 수 있다:

“당사는 NGFS(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의 기후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1.5°C, 2°C, 3°C 경로를 검토하였습니다. 탄소 가격이 2030년까지 톤당 100달러 이상 상승하는 1.5°C 시나리오에서는 주요 제품의 수익성이 약 8~12%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반면 저탄소 인증 제품의 경우 시장 프리미엄 효과로 인해 수익성이 5~7%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분석 결과는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품 포트폴리오 재편성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으며, R&D 투자 우선순위 결정에도 반영되었습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검토 여부를 넘어, 시나리오 분석이 실제 경영 의사결정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설명을 통해 기업의 전략적 준비도(strategic preparedness)를 평가할 수 있다.

시나리오 분석의 공시에서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가정의 투명성이다. 어떤 탄소가격을 적용했는지, 어떤 물리적 리스크 변수를 고려했는지, 시나리오별 시간 범위는 어떻게 설정했는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이는 공시의 비교가능성(comparability)과 신뢰성(reliability)을 높이는 핵심 요소다.

CBAM은 전환 리스크의 실제 사례

IFRS S2 관점에서 보면, CBAM은 매우 유용한 전환 리스크(transition risk)의 현실적 사례가 된다. CBAM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 공급망 조정 가능성, 원가 구조 변화, 수출 경쟁력 약화 우려 등은 기후 규제가 재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설명하는 데 구체적이고

CBAM 확정 기간 진입과 KSSB 기후 공시 의무화 대응



현실적인 근거를 제공한다. 특히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등 CBAM 적용 대상 품목을 다루는 기업에게는 이것이 가장 명확한 재무 연결 고리가 될 수 있다.

SR보고서에서 CBAM을 단순히 제도 개요나 대응 현황 설명으로 끝내기보다는, 다음과 같이 재무적 함의를 연결해 설명할 수 있다면 IFRS S2에 부합하는 공시가 된다:

“당사의 주요 수출 품목인 철강 제품은 2026년부터 EU CBAM 적용 대상입니다. 현재 당사 제품의 탄소집약도는 EU 벤치마크 대비 약 15% 높은 수준으로, 이는 연간 약 120억 원의 CBAM 인증서 구매 비용으로 추정됩니다. 당사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고로 공정 효율화와 수소환원제철 기술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8년까지 탄소집약도를 EU 벤치마크 수준으로 낮춰 CBAM 비용을 50% 이상 절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총 투자 규모는 약 800억 원으로 추정되며, 해당 투자는 중기 재무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서술은 CBAM이라는 규제를 단순 정보가 아닌 재무적 리스크와 대응 전략의 맥락에서 다루고 있다. 동시에 투자자에게 기업이 해당 리스크를 인식하고 구체적 대응 계획을 수립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CBAM 대응 과정에서 확보한 저탄소 생산 역량은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는 리스크를 기회로 전환하는 전략적 접근의 사례가 되며, 이 역시 IFRS S2 공시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는 내용이다.

기후공시는 이제 환경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재무와 전략의 이야기다.

2026년 이후의 기후공시는 더 이상 ‘우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라는 선언의 공간이 아니다. 그것은 기후변화라는 구조적 변화가 우리 기업의 재무와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우리는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경영의 언어다.

이미 SR보고서를 작성해 온 기업일수록, 새로운 보고서를 하나 더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기존 문장을 다시 읽고, 그 문장이 재무적 질문에 답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다. 많은 경우, 필요한 정보는 이미 기업 내부에 존재한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있다.

IFRS S2가 요구하는 기후공시 변화의 방향은 분명하다. 기후공시는 이제 환경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재무와 전략의 이야기다. CFO와 CSO가 함께 만드는 공시, 전략기획팀과 ESG팀이 협업하는 공시, 그리고 무엇보다 이사회가 직접 검토하고 승인하는 공시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국내 기업들에게 2026년은 도전이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하다. IFRS S2 수준의 공시를 먼저 준비한 기업은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신뢰를 얻고, ESG 평가에서 우위를 점하며, 장기적으로는 더 낮은 자본비용으로 성장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

[참고] 본 원고는 EU 옴니버스패키지와 최근 CBAM 관련 최종안과 최근의 IFRS S2 기준과 TCFD 권고안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 환 경

기후 변화 대응 녹색금융

친환경 기술 혁신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 신설 무공해차 보급정책 (전기차 화재 안심 보험)

프레스뉴스 | 2026-01-27 | <http://www.pressna.com/news/newsview.php?ncode=1065588453528235>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로 탈탄소 녹색투자 시장 문 넓힌다

임팩트온 | 2026-01-12 |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7585>

EU 탄소관세 폭탄 피하라 정부 수출기업 구제 위해 범부처 총력전

헬로티 | 2026-01-26 | <https://www.hellot.net/news/article.html?no=109667>

[분석] 기후위기 다보스의 중심에서 비켜섰다

더나은미래 | 202-01-19 | <https://futurechosun.com/archives/142253>

[포커스] 국내 RE100 이행장벽 세계 최고 수준

CEO뉴스 | 2026-01-20 | <https://www.ceo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642>

“2026년 한국 탄소배출권 톤당 5만 원 돼야 EU 납부 제로”

파이낸스투데이 | 202-01-26 |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5579>

S 사 회

산업 안전 노동권

동반 성장 소비자 보호

현대차 노조 “노사 합의 없이 로봇 도입 단 1대도 안돼”

조선비즈 | 2026-01-24 |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6/01/24/X42JAXVFNFD6TO6SRQ5CYTLKRU/

단 1대도 들어올 수 없다... 현대차 노조의 '네오 러다이트' 논란

뉴스핌 | 2026-01-26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126000036>

300조 별도도 파업 위기? 현대차 노사 갈등의 끝은 어디인가

동행일보 | 2026-01-26 | <https://www.dh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 산재 사망 구조 고착...집행유예 판결 반복

녹색경제신문 | 2026-01-26 | <https://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336158>

금호건설 오송 참사로 공공입찰 제한 법원에 효력정지 신청해 한숨 돌려

조선비즈 | 2026-01-27 | 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6/01/27/5BYTWHNZ35AV3JWXV5LJ5UQJY4/

상생금융 1조 7000억 원·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로 성장자본 공급 확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01-21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8370>

대·중소기업 미국 동반 진출하면 지원 2배 확대

한겨레 | 2026-01-21 |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240819.html

G 지배구조

투명 경영 주주 가치

글로벌 규제 대응 공정거래

[코스피 5000 시대] 오천피 밟았지만 주주 권리는 '박스권'... 자사주 소각은 언제쯤

조선비즈 | 2026-01-23 | https://biz.chosun.com/stock/stock_general/2026/01/23/NFNPZVC7GBARPBRRT6BTKRLJPQ/

정부 자사주 '자본'으로 명시 추진... 세법 개정도 병행

연합인포맥스 | 2026-01-22 |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94780>

경제 8단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반대... 배임죄 개선 먼저”

동아일보 | 2026-01-20 |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60120/133193865/1>

국민연금 대체자산·위탁운용사에 수탁자책임 활동 강화한다

머니투데이 | 2026-01-12 | <https://www.mt.co.kr/policy/2026/01/12/2026011210452211960>

국민연금 대리인 지위 남용해 기업 경영 개입 (국회토론회)

키드(Kidd) | 2026-01-26 | <https://kidd.co.kr/news/244770>

김남근 의원 “복지부 전문성 부족... 일본처럼 금융당국이 NPS 감독해야”

한국금융신문 | 2026-01-23 | 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26012314222285772a735e27af_18

종합/트렌드

다보스포럼과 2026년 ESG 키워드: 실행·전환·확장

전자신문 | 2026-01-25 | <https://www.etnews.com/20260123000161>

ESG 통계 지표

2025년 12월 기준

1. ESG 금융

(1) 국내 사회책임투자
채권 상장 종목 수
(매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

(단위: 개)

구 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녹색채권	295	301	308	310	314	317	328	328
사회적채권	1,704	1,724	1,741	1,751	1,769	1,763	1,772	1,799
지속가능채권	236	225	221	221	217	215	208	202

(2) 국내 사회책임투자
채권 상장 잔액
(매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

(단위: 천억 원)

구 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녹색채권	260	257	258	264	267	269	282	285
사회적채권	2,120	2,112	2,111	2,110	2,108	2,077	2,085	2,102
지속가능채권	164	160	160	158	158	159	154	151

자료: KRX 사회책임투자채권-통계-상장현황

2. ESG 평가

(1)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현황
(*25.12.31)

(단위: 건)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	14	20	38	78	131	161	204	226

(2)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현황
(*25.12.31)

(단위: 건)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지배구조보고서	101	213	224	231	355	380	530	549

자료: KRX ESG 포털

3. 기타 통계

RE100 참여 국내외
기업(기관) 누적 수(*25.12)

* CF100 참여 기업 수:
177개 (*25.9)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국내	-	-	6	14	27	36	36	36
글로벌	141	204	269	335	393	426	439	446

자료: <https://www.there100.org/re100-members>, <https://24-7cfe.com/>

담당자 및 문의처

최영준 연구원 | E. cyj@korcham.net

*지속가능경영원